



즉시 사용

담당	국무조정실 규제혁신제도과	과장 이성도, 서기관 한레지나 (044-200-2446, 2415)
	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	과장 이진수, 사무관 조경래 (044-202-6140, 6142)
	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규제샌드박스팀	과장 안세진, 사무관 홍석민 (044-203-4510, 4512) 팀장 권기만 (044-203-4520)
	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 기획총괄과	과장 성녹영, 사무관 남현재 (044-865-9712, 9713)
	금융위원회 금융규제샌드박스팀	팀장 정선인, 사무관 김기훈 (02-2100-2841, 2872)

‘규제에 갇힌 규제 샌드박스’ 제하 기사 관련

- 2019.11.29.(금) 한국경제 -

1. 보도내용

- ☐ ‘규제에 갇힌 규제샌드박스’ 제하 기사에서,
- ‘까다로운 조건부 승인 남발, 심의 과정에서 규제부처의 소극적인 태도 등’을 보도

2. 설명내용

- ☐ 정부는 지난 1월부터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여 운영 중입니다.
- 규제샌드박스는 그동안 기존 규제로 인해 시도조차 하지 못했던 신산업들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시장출시 또는 시험·검증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.

- 기사에서 지적인 내용 중 일부 규제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내용이 있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.
- 실증특례는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거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, 제한된 조건 하에서 신기술·서비스를 시험·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.
 - 따라서 규제를 완전히 없애 사업이 가능토록 하는 조치는 아니며, 시험·검증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·안전·환경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건을 부여하여 제한된 범위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.
 - 이후 실증 결과에 문제가 없다면,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정식 시장출시를 전면 가능하게 합니다.
- 한편, 실증특례와 함께 임시허가 제도를 운영하여, 안전성에 문제가 없음에도 규정이 불합리·불명확하여 사업이 어려운 경우 즉시 시장진출을 허용하고,
 - 정부는 임시허가 기간 중에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정식 허가로 전환토록 하고 있습니다.
- 정부는 사업의 시장진출을 촉진하고 사업자들의 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특례기간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실증 결과에 문제가 없다면 즉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,
 - 아울러 실증 과정에서 당초 제시된 부가조건으로 실증에 애로가 있는 경우, 사업자가 부가조건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.
- 앞으로도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신산업·서비스 분야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유용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